

유류세 인하 계획 “검토안한다”

정부, 국민경제 실효성 적어 논의 ... 탄력적 운용방침 유지

열린우리당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정부는 당분간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04년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각계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열린우리당의 유류세 관련 발표는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른다면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여부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 국제유가와 경제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재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가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인하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의 입장은 한나라당이 8월에 유류세 10% 한시적 인하를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의 탄력적 운용 방침을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적고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꺾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한해 세수 1조원 감소를 무릅쓰고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인하폭이 리터당 20원에도 못미쳐 재정부담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더욱이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던 Dubai유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며 37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도 유류세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도 8월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고 밝혀 유류세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정덕구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연내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화학저널 2004/09/03>